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보도

<기자회견문> 한미 FTA 9월 국회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1.09.09 작성자 관리자 Views 3855

<기자회견문> 한미 FTA 9월 국회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위키리크스 비밀 공개에서 드러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채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는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 FTA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진행한 정보 수집 활동이 무수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진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면 한미 FTA협상자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협상이라고 본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회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까지 드러난 무수한 의혹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4대 선결조건

한국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2006년 2월 직후에 열린 2006년 3월의 경제 통상 협의회(QTM)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스크린 컷터, 자동차 등이 FTA 개시 선언을 끌어 낸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06SEOUL864)그런데도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4대 선결 조건 자체를 국민에게 부인했다. 그러다가 2006년 7월에서야 공식 인정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그 출발에서부터 밀실협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회의 내용 공개

당시 주한미 대사 버시바우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 전문(06SEOUL2505)에 의하면, 김현중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그리고 이 회의의 초점이 한국이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FTA 지원 4대 과제와 조직 공개

또한 2006년 6월 13일자 주한미대사관 보고 전문(06SEOUL1963)에 따르면,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 수석은 2006년6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FTA 지원의 네 가지 과제와 관련 정부 내 조직에 대하여 브리핑을 제공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협상의 성공으로서 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의 협상 전문조직, 둘째 서비스 분야와 기타 산업 등 민간부분의 이익을 조정하는 재정경제부, 셋째 관료들로는 능숙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FTA 반대 그룹을 만나고 누그러뜨리는 정치적대처 조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FTA 반대진영을 끌어내고 그들의 감정적 주장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청와대홍보 수석실이 그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08년 촛불항쟁을 불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도 놀랄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월 16일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노우에 미 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등을 만나 쇠고기 문제가 FTA비준 등 한미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08SEOUL102) 이 당선자는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는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캠브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될 것이라면서 "이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개방될것"을 장담했다고 한다.(08SEOUL112)

주한미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미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 문서(08SEOUL592)에는 이대통령이 방미순방을 통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OIE기준에 따라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대사는 한국의 무역팀은 이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몰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약가 적정화 방안

주한미대사가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을 보면 한국의 당시 FTA 협상대표였던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미국측의 이익을 위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내용이 나온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전문에 따르면 김현중 본부장은 또한 이와 관련한 7월 21일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미 대사가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약가결정방안을 FTA협상에서 논의하도록 주장하겠다고 하자 김현중 본부장은 이를 양해한다고 말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한미 FTA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미국의 이익관철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 결정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과정 및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2006년 3월 16일 전문(06SEOUL864)에 의하면, 2006년 3월의 1/4분기 정례 통상 협의회(QTM)에서 한국은 삼계탕(the ginseng chicken soup) 수출 허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제기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삼계탕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밀문서들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은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이라는 촛불시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 또한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에게 한국의 협상대표와 고위 관료들이 청와대의 FTA 회의 내용이나 한국 정부의 FTA 지원 조직 역할 등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FTA 협상이 공평하고 대등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을 제공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리크스의 전문에 나오는 한국의 통상 협상 책임자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과연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FTA 협상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국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와 협상과정 및 내용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수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국민적 검증과정도 없이 단지 미국의 사정에 따라 국회 외통위 상정에 합의했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해 규탄한다. 또한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9월 국회상정이 아니라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무수한 의혹 및 한미 FTA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FTA 협상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1. 국회는 9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상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1.9.8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정책자문위원회

List

국회개헌추진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